

고령화 가속...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농촌 소멸 위기'

청장년 인구 유출에 급격한 고령화로 농촌 인구 빠르게 감소 농촌경제연구원 "국가 차원의 농촌 소멸 대응책 마련 시급"

인구 감소와 청장년 인구 유출, 주민 고령화 심화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추진해야 할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농촌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인구 공동화 심화로 인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농촌 고령화율은 26.1%에 이르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먼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은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미래 인적 자원 확보'와 '활동 주체 양성'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당연한 농촌 현안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농촌형 경제활동 육성과 서비스 개선, 인적 자원 확충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한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소득 기반 확충, 저밀도 사회에

적합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

농경연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등 농촌형 경제 육성을 지원해 관련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선 농촌 지역 대상 신규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은 보건·의료, 복지, 보육,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서비스 확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농촌형 서비스

모델' 확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생활 인구 저변 확대...미래 농촌 이끌 활동 주체 확보 지원

생활양식이 확대되는 트렌드에 대응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살아보기 체험 공간을 만들고 주거 지원,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미래 농촌을 이끌 핵심 인력 확충을 위해선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촌 중간 지원조직과 지역공동체, 농촌 융복합산업 관련 주체 대상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중앙 단위의 부처 협업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농촌협약 등과 연계한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지자체별 특화된 농촌 소멸 대응 전략 적극 추진토록 뒷받침

농경연은 지역 여건 진단과 미래상 도출, 농촌 재생 전략 수립과 과제 추진 등 농촌 소멸 대응 시책을 이끌어갈 주체로 지자체를 꼽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생 지원 법률'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 주도형 '농촌 소멸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촌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연계해 관계부처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 수립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도 농촌 소멸 대응 과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선욱기자



'즐거운 스케이트'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인터넷서 총기아닌 총기부품·총알만 구매...법원 판단은?

인터넷서 총포신, 화약 등 두차례 구매 피고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인터넷에서 총기가 아닌 총기 부품과 총알만 구매했다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까. 법원은 총기와 그 부품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상이해 형량도 변경돼야 한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종령·조은래·김용하)는 지난해 9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2~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총포신과, 쇠구슬 각종 화약 등을 구매했다.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총포신 11개와 지름이 약 4-15.5mm인 산탄 탄알, 염산과 화약 등 각종 위험물질도 함께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다. 양형부당 주장을 심리하기 이전에 1심이 A씨의 혐의에 대해 적용한 총포화약법 조항 중 일부에 문제가 있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 법원이 A씨에게 적용한 조항은 총포화약법 70조 제1항 제2호다. 이 조항은 "관할 경찰서장 등의 허가 없이 권총이나 소총 등의 총포류를 소지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이 아닌 70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권총과 소총 등을 제외한 총포나 화약류를 소지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1심이 적용한 법률보다 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재판부는 A씨가 구매한 총포신이 완성된 총기가 아닌 총기부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조를 잘못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김수권기자

익산 단독주택서 화재...80대 노부부 숨진채 발견

전북 익산시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노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16분께 익산시 함라면의 한 단독주택

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A(88)씨와 아내 B(8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택이 전소되는 등 15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